社 說

장기적 안목의 투자 시급

— 한국교육정책에 대해

한국에 있어 교육의 문제는 사회내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선한다. 매년 겨울이면 불어닥치는 대학입시바람에서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입시제도의 조변석개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넘침은 있으되 제대로 된 교육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전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국민학교 분교 폐지방침은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사회성 계발,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분교 및 국민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껍데기에 불과해 보인다.

얼마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경기도 가평의 두밀분교 폐교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는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를 더욱더 신뢰하는 듯하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 2명과 사무직 1명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연간 5천만원에 이르고 기타 경비를 합하면 6천만원에 이른다는 수치를 들어, 학생 30명을 가르치기 위해 이러한 경비를 쓴다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폐교의 운명에 처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성질의 것임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발상이 행정편의주의와 비용의 효율성만을 따지는 비교육적인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측에게 더욱더 깊은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하다.

굳이 교육부에서 경제의 원칙을 내세워 이같은 방침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교육의 사생아인 사교육비의 비대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수조원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컨면 이같은 음성적인 교육비를 공식적인 교육의 경로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지 당국자에게 물어보고 싶다.

물론 국내의 교육시장이 머지않아 개방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교육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을 예측하는 이가 많지만, 그러한 개방의 파고가 반드시 돈의 집중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 일반 기업의 자본 운용과 동일하게 전행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나라의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너무도 아쉬운 때다.

알 권리와 알릴 권리 불가분 관계

— 보도지침 폭로로 무죄선고를 접하며

서울형사지법 항소 4부(재판장 성기창 부장판사, 주심 윤성원 판사)는 지난 5일 암울했던 시대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던 보도지침 폭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홍(당시 민주언론운동 협의회 사무국장)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한국 언론사에 한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보법의 탄력적 해석, 외교상 기밀을 '실질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킨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도덕적이지 못한 정부가 국민앞에 사과하기는 커녕, 김태홍씨 등을 국보법의 올가미에 묶고, 국민적 관단이 끝난 사건이 사법부의 유권해석으로 마무리되기까지 8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다. 보도지침이라 하면 군사정권시절 정부가 언론기관에 보도 방향을 하달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할 뿐 '말'지의 폭로로 불거져 나왔고, 김태홍씨 등이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지금, 군사정권시절의 악법과 불합리와 모순은 여전히 남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구와 개혁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 질서는 양심적인 사법부를 요구하지만 그들의 행태에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생리적으로 사회변화를 알질러가지 못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기대한 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도 오래 전에 판명되었다. 우리는 서울형사지법의 이번 판결이 정부의 시녀라는 비난을 샀던 사법부가 그 명예를 벗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이번 판결을 보면서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보도지침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 반은 책임이 있다 할 언론은 그 시절 보도지침을 충실히 지킨 덕분인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보도방향은 권력이 일일이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비판은 권력과의 조율을 거친, 광고를 팔고 신문을 팔기 위한 상품가치로서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언론이 세련되고 간접적인 통제도 단호히 거부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중단하기를 당부한다. 권력 앞에 무력했던 언론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편파·왜곡보도 일삼는 언론의 쳇바퀴

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실태

사례

정부에 호의적인 언론

그간 우리 언론의 노사문제에 관한 불공정 보도관행은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노동탄압에 대한 침묵, 쟁의의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한 설명 부재,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고의적 편견, 쟁의로 인한 피해 등 파급효과에 대한 과장보도, 공권력 개입의 정당화 등 노사문제에 있어서 언론은 노사간의 입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보도하려는 노력이전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자체를 금기시하는 보도태도를 보여 왔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주역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사용자와 정부에만 호의적인 언론의 보도태도는 이미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한 신문의 보도태도는 문민시대의 언론으로서의 탈바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간의 불공정 보도관행들을 점대성한 듯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번 파업보도중 가장 크게 왜곡된 부분은 6월24일의 철도와 지하철 파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지적이 없었거나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23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전국 14곳 농성기관사 전원연행"이라는 소제목으로 공권력 투입의 의미를 축소하였고, 동아일보는 24일자 1면 머릿기사의 제목에서 공권력 투입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실에서도 파업을 결의한 전기협측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공사측과 정부에만 호의적인 언론의 보도태도는 여전하다

노조만의 책임인가

더욱이 조선일보24일자 1면의 경우 제목에서 공권력 투입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내용에서조차 이번 파업이 공권력투입에 대한 반발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설에서는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박수를 보내달라는 논조를 펴고 있다. 이처럼 조선, 동아 등 주요일간지는 27일로 예정되었던 파업을 23일로 앞당긴 장본인이 정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철도파업이라는 결과만을 보도하고 비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보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면에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발목인 국민들 분노'(동아), '정말 왜 이러나'(중앙), '국민이 인질인가—분노(조선)' 등 천편일률적으로 분노를 강조하는데 그쳐고있다.

누가 시민을 이용하나

시민 인터뷰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24일 기관사들에게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과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의 발언만을 스케치 하였다. 중앙일보도 기관사를 탓하는 발언 두가지를 스케치하였고, 말미에 "정부도 아무런 대책없이 감작스레 기관사들을 연행했다"는 차원에서 보도하였을 뿐이다. 동아일보는 노조와 정부 양측 모두를 비난하는 몇몇 시민과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하기는 했으나 선운행과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데, 기관사들을 꾸짖는 발언만을 일관되게 보도하였다. 당장 자신의 교통불편에 화가 난 시민의 발언만을 모아놓고 이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여론인양 보도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노사문제 보도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인 쟁의행위의 원인과 과정설명 부재 역시 이번 파업에서도 여전히 드러났다. 파업이후 6월24일과 25일에 주요일간지들은 변형근로시간제 철폐와 임금인상이라는 철도와 지하철노조의 요구사항과 파업까지의 과정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보도이다. 파업이 있기 이전에도 각 신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협상과정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진 후에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현행 언론보도 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또한 쟁의행위의 원인을 언급하면서 배후세력과 소수 과격 노조지도부의 문제점, 노동단체간의 입장차이 등을 부각시키는가 하면, 지하철 공사와 철도청의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강조하는 등의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태를 '노사분규나… 정치투쟁이냐(조선 6/24)'는 식의 정치적 양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과 정부와 노동계의 맞대결로 그려낸 한겨레신문의 제목뽑기 역시 바람직한 보도태도에서 벗어났다고 보여진다.

민중의 목탁으로 거듭나야

이번 철도파업에 있어서 신문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무조건 선운행'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일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는 역으로 시민의 발을 담보로 정부나 공사측의 입장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에 대해서 전자의 논리만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이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보도해 주고, 그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적극 고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신이 노동자들에 호의적이지 못하고 편향적인 보도를 가함으로써 정부측의 강경대응은 더욱 가속화되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언론의 책임 역시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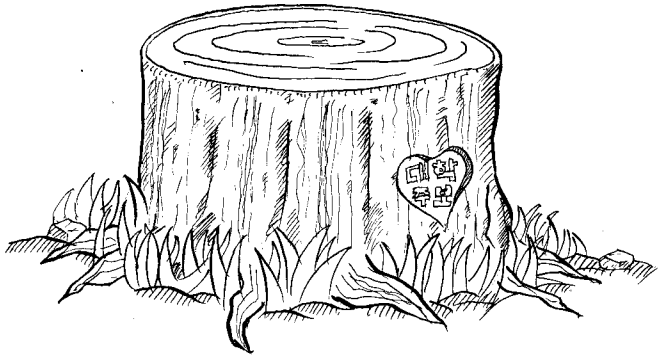
김 언 경
〈민언협 신문분과원〉

파업으로 치달은 원인·과정 설명 전무
언론의 공정한 보도태도 절실히 요구돼

(고) (황) (만) (평)

"반세기만의 만남이 …"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그루터기가 제일이야"



나무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몸뚱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열매와 가지, 몸뚱이까지 모두 줘 버린
늙은 그루터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쉴곳이 필요한
노인으로 변해버린 소년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주보사는
경희인 모두에게
'그루터기'가 되고자 합니다.

대 학 주 보 사